

박탈의 실태 진단 및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¹⁾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Cohesion:
Their Correl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여유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령별·영역별 박탈의 수준과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째, 노인은 전반적인 박탈 경험률이 높은 데 비해, 중장년층은 특히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노인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을 불문하고 전체적인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은 박탈과 사회적 포용 간에, 장년층은 박탈과 사회적 신뢰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기초생계의 박탈이 높을수록, 장년층은 문화와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청년 세대의 사회이동 경로 확대와 이행기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 강화,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만(Zygmunt Bauman, 1925~2017)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얼마나 전 작고한 세계적 석학인 지그문트 바우 의하는 남부럽잖은 생활수준에 의해 측정될 때,

1) 본 원고는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제5장 내용을 수정·발췌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이며, '정상적인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 즉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박탈과 배제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움과 죄의식, 그 사회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기회들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와 적의가 생기고, 그것은 폭력 행위나 자기 경멸의 형태로 또는 둘 다로 배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²⁾ 바우만의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묻지 마 폭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대변하는 듯하다. 빈곤과 상대적 박탈로 대변되는 사회적 배분으로부터의 배제는 사회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탈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치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절대적 빈곤과 결핍을 경험한 전(前) 산업사회에 살았던 노인 세대는 상대적인 박탈에 덜 민감할 수 있다. 반면 산업화와 정보화사회의 풍요를 경험하며 자란 디지털 세대, 즉 청년 세대는 물질적 결핍과 상대적 박탈 그리고 기회의 제약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박탈의 수준과 영역에 따라서도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집세를

내지 못하거나 난방을 못 할 정도의 극한 박탈 경험과, 가족 단위의 외식을 하지 못하거나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박탈 경험이 사회통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연령에 따라 청년 세대(35세 미만), 중장년 세대(35~64세) 그리고 노령 세대(65세 이상)로 구분하여 세대별 박탈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러한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세대별·영역별 박탈 수준의 차이와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령별·영역별 박탈의 실태³⁾

박탈(deprivation)은 빈곤의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1979년 영국의 빈곤 연구 대가인 피터 타운센트(Peter Townsend, 1928~2009)에 의해 처음 학술적으로 제기된 개념이다. 그는 빈곤을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 관습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빈곤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즉, 현재 소득은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자원들-예컨대 신체적 자산이나 저축 같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2)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p.72에서 문장 일부 수정.

3)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원자료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3669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자원의 결핍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결과적 측면이다. 이러한 소득 측정치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보다는 자원의 결핍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 타운센트는 박탈지표를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자

표 1. 연령별·영역별 박탈 경험률¹⁾

분류	구분	항목	전체	연령별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상대적 박탈	기초생계	1주일에 1회 이상 육류 섭취	6.99	4.35	6.50	16.99	
		1주일에 1회 이상 과일 섭취	7.12	6.49	6.07	14.73	
		기호식품 구입	2.99	1.35	2.51	10.23	
		동절기 의류 2벌 이상	4.04	2.38	4.38	6.67	
		계절 정장 보유	9.26	9.25	8.55	13.27	
	주거	적절한 난방	2.07	0.99	2.28	3.90	
		적절한 방수	3.56	3.86	3.66	2.22	
		10분 내 대중교통	2.34	1.19	2.52	4.54	
		옥탑방이나 (반)지하 아닌 지상 거주	5.46	6.38	5.13	4.76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 시설	0.96	0.53	1.00	1.92	
	의료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진료	7.84	7.80	7.99	7.14	
		치과 치료	4.35	3.44	4.12	8.15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매	1.35	1.07	1.36	2.10	
	문화	1년에 1회 이상 가족 여행	26.10	21.86	24.17	48.65	
		특별한 날 기념	11.07	8.35	11.06	18.63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	26.65	17.70	26.64	51.32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5.43	2.77	5.65	11.54	
	미래대비	비일상적 지출에 대비(저축)	26.28	24.20	23.28	48.87	
		노후 대비 연금이나 저축	25.40	30.06	19.47	45.96	
		사보험 가입	16.74	18.67	11.72	39.67	
	교육 ²⁾	자녀 고등교육 가능	5.30	2.19	6.12	11.84	
		학원 수강이나 과외 가능	9.79	5.79	10.80	19.54	
		기본 참고서나 도서 구매 가능	2.61	1.28	2.57	17.26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 책임	3.26	1.71	3.30	17.26	
	절대적 박탈	기초생계	결식, 절식	5.20	4.40	5.69	4.62
			공과금 미납	5.64	4.49	6.73	2.74
			전기, 전화,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	2.34	1.37	2.86	2.03
		주거	추운 겨울 난방 불가	3.13	1.02	3.73	5.58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2.38	2.25	2.75	0.63	
의료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감	2.79	1.57	3.16	4.02	
교육 ³⁾		공교육비 1개월 이상 체납	3.77	2.90	4.06	3.69	

주 1) 상대적 박탈 항목들은 항목 내용 뒤에 "할 수 없음" 혹은 "없음"이 생략되어 있음. 예를 들면, 제시된 비율은 경제적 이유로 "1주일에 1회 이상 육류 섭취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3)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된 사람 대비 비율임.

4) 색칠된 부분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의미함.

자료: 정해식, 김미근,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7-138.

시도하였다.⁴⁾

〈표 1〉은 타운센트의 박탈지표에 기초해 개발된 박탈 항목 31개에 대한 연령별 박탈 수준을 보여 준다.⁵⁾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명 중 약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여행을 갈 수 없거나(26.1%),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없거나(26.65%),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26.28%),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25.40%)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거나,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할 물질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박탈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16.74%),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할 여력이 없는 경우(11.07%), 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도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경우(9.79%), 계절 정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9.26%) 등이다.

절대적 박탈 경험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5.64%),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5.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1개월 이상 주지 못한 경험(3.77%),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3.13%),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2.79%), 집세가 밀렸거나 이로 인해 이사한 경험(2.38%),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의 경험(2.34%) 순이었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 박탈 항목 중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0.3%로, 균등화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12.3%에 비해서는 낮지만 상당한 비율이다. 즉, 10명 중 1명 정도는 연간 절대적 박탈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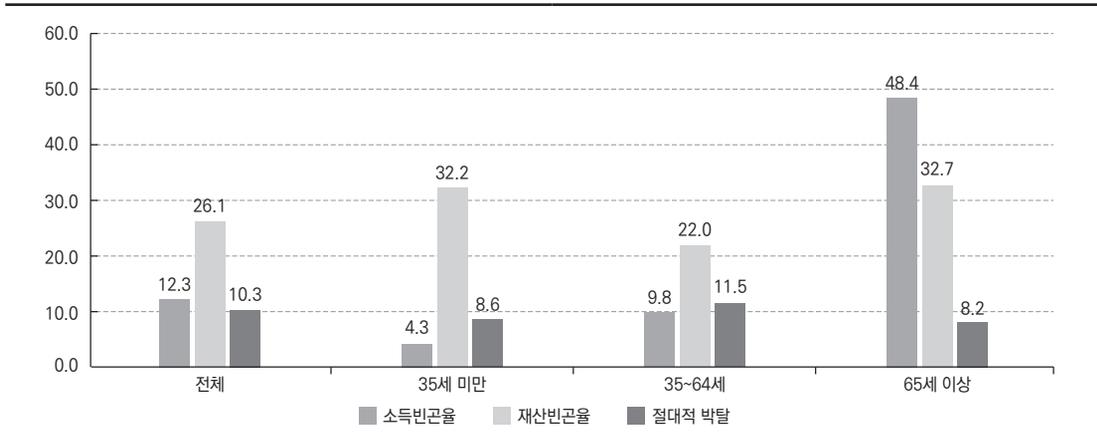
연령별로 볼 때 두드러진 점은 첫째,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박탈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절한 영양의 섭취에서 취약함을 드러냈으며, 문화생활이나 미래 대비에서도 박탈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료 및 건강 영역에서는 치과 진료가 필요한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8.2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찌 보면 매우 현실성 있는 결과로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48.4%에 이르는 노인의 높은 소득빈곤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소 놀라운 결과로, 지난 1년간 한 가

4) Townsend, Peter(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Harmondsworth: Penquin Books; 여유진, 김미곤 등(2007). 2007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p.472.

5)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탈지표 역시 타운센트에 의해 개발된 초기 지표들을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이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빈곤율(중위 50% 기준)과 절대적 박탈 경험률



주 1) 소득은 1인 균등화된 가구소득 기준이며 재산은 가구총재산 기준임.
 2) 절대적 박탈은 박탈 항목 7개 중 1개 이상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8.

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5~64세 중장년층에서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적 박탈(chronic deprivation)의 경우 상시적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반면, 일시적이고 급박한 생활상의 박탈(acute deprivation)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면서 가장의 실직, 파산, 가정 해체 등에 따른 소득 하락이나 가구원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지출 증가의 위험에 직면한 중장년층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⁶⁾ 특히 이들은 공과금이나 자녀 공교육

비 체납,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그리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경험 등을 한 사람의 비율이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5세 미만 청년층은 대부분의 박탈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이지만 주거의 질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6.4%, 적절한 방 수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청년 주거 빈곤 문제에 좀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켜 준다.

6) 만성적 박탈과 급성적 박탈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제기한 것이다. 전자는 지속적인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상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억제됨으로써 나타나는 만성적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어떤 이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기존에 누렸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급성적 곤궁 상태를 의미한다. 공과금, 집세, 공교육비 체납과 같은 상황을 본 연구에서는 급성적 결핍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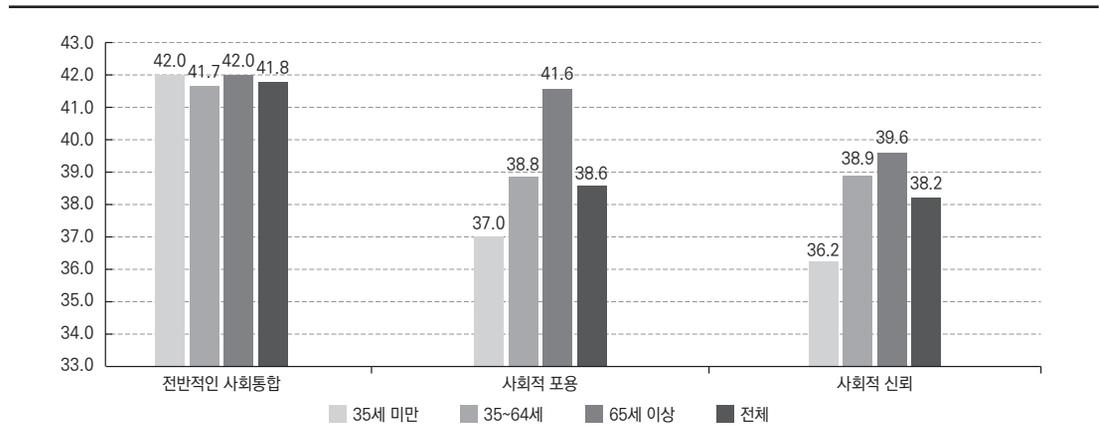
3. 연령별·영역별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인 박탈과 사회통합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태 변수로서의 박탈지표는 사회통합 인식지표로 바로 치환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둘 간의 관계를 인과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바우만이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에서의 물질적·사회적 박탈은 사회가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 나아가 분열적이고 갈등이 심하다는 생각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로 자신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과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박탈의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별 사회통합 인식점수⁷⁾는 아래 그림과 같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점수는 41.82점,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점수는 38.60점,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점수는 38.22점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체로 청장년

그림 2. 연령별 사회통합 인식 점수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2 <표 5-6>을 도표화함.

7)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조작화되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0~10점)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인식을 계속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 개의 문항(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대 배려와 포용의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대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대 경제적 희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두 개의 문항(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대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을 활용하였다. 박탈지표 점수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인식 점수도 표준화를 위해 합산한 후 최댓값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세대는 노인 세대에 비해 우리 사회의 통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사회통합 점수를 제외하고—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령별·박탈 영역별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박탈의 영역을 6개로 재분류—기초생계박탈, 주거박탈, 의료박탈, 문화박탈, 미래대비박탈, 교육박탈—하여⁸⁾ 회귀분석을 한 결과⁹⁾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총박탈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가 통합적이지 않으며 차별이 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초적인 생계를 꾸릴 수 없을 정

도의 박탈(기초생계박탈)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지와와의 적절한 교류나 여가 활동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사회적 포용과 신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다. 또한 앞서 단순 총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박탈 정도나 교육 수준 같은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청년은 중장년이나 노인에 비해 사회의 포용도나 신뢰도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35세 미만 청년은 총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 사회통합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과 소외가 심하고 활력이 없으며 미래가 불안

표 2. 회귀분석(OLS) 결과 요약: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박탈 영역

		전체	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사회통합 전반에 대한 인식	총박탈	***	***	***	**
	영역별 박탈				
	-기초생계	**	*		
	-문화	***		**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	총박탈	***	***		*
	영역별 박탈				
	-문화	**		*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총박탈	***		***	
	영역별 박탈				
	-기초생계	**	***		
	-문화	***	*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유의미한 것으로 표기된 모든 변수의 계수값은 (-)임. 즉, 해당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통합점수는 낮아짐을 의미함.

자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44-150 요약 정리.

8) 표 1에서 상대적 박탈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1점을, 절대적 박탈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인(가구)별로 박탈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합산된 총점을 최대박탈점수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9)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19~34세, 35~64세, 65세 이상), 학력(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경제활동 상태(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투입하였다.

한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총박탈점수와 사회에 대한 신뢰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기초생계에서의 박탈 경험과 사회적 지지, 문화 영역에서의 박탈 경험은 사회적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64세 장년층은 전반적인 박탈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를 통합적이지 못하고 서로 믿기 어려우며 배려하지 않는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낮고 여가 활동을 하기 어려울수록, 비일상적인 지출이나 노후 대비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사회적 지지와 문화 차원에서의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노인의 경우 청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전반이나 사회적 포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청장년층에 비해 크지 않았다.

요컨대 연령을 불문하고 전체적인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은 박탈과 사회적 포용 간에, 장년층은 박탈과 사회적 신뢰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기초생계 박탈이 높을수록, 장년층

은 문화와 사회적 지지 차원의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4. 나가며

박길성 교수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해 “권력은 있으나 권위는 없고, 쓸림은 있으나 신뢰는 없고, 관계는 있으나 연대는 없는 사회”로, 이는 “과속과 쓸림이 만들어 낸 갈등의 결과”라고 기술한 바 있다.¹⁰⁾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채 달려온 압축성장의 부수적인 결과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본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박탈과 빈곤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주로 소득이나 지출—드물지만 재산—을 많이 활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로서 박탈지표는 총량적 수준에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의외로 상관관계의 수준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0.2 내외) 사회통합 인식에 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¹¹⁾ 다차원적 빈곤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지표로서

10) 박길성(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 사회의 갈등지형과 연대적 공존의 모색, 고려대학교출판부. p.22.
 11) 사회통합 인식과 박탈 간의 상관관계 수준이 더 높았고, 지면에 실지는 않았으나 소득, 재산 혹은 소득계층 변수를 투입한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박탈지표의 활용도를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년층의 경우 소득과 재산의 빈곤율은 노인에 비해 훨씬 낮지만 지난 1년간 절대적 박탈을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노인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집단인 만큼 상시적 빈곤에 빠질 위험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애주기상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연령대인 만큼 소득수준이 생활 영역 전반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장기적인 저소득으로 인한 만성적 박탈의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중장년층은 가정 해체, 실직,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긴급지원제도의 역할을 좀 더 확대, 보강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35세 미만 청년은 기초생계의 박탈이 일어날 경우 사회통합의 포괄적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생애주기상 이행기, 즉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결핍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은 청년의 전반적

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보고서¹²⁾의 결과, 즉 최근 세대로 올수록 사회의 기회구조가 점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사회이동 경로 확대와 청년 일자리·복지 연계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은 특히 문화적 박탈과 미래대비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의, 긴 평균 근로시간¹³⁾으로 대변되는 “피로사회” 한국의 단면을 보여 준다. 즉, 긴 노동시간, 경쟁의 강화와 인간관계의 파편화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특히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미래 대비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공적 보장제도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에게 상시적 불안감을 안겨 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12)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등(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한국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많다(한국일보, 2016. 8. 15. “한국 근로자 노동시간 OECD 2위, 임금은 중하위권”).